全學鎬

障礙者, 老人, 主婦들(勞動競争力不充分者들)의 競争力補充政策의 經濟性 優位(및 그 方向)

Ⅰ. 序 論

Ⅱ. 政策の 經濟性 優位 및

先進國의 長生者 營養 規則

Ⅲ. 勞動力化 方向

I. 序論

“再活事業은 國家의 人的 資源開發에 必要한 것이다.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는 遊休勞動力を 적극 활용하여야 하는데 상당수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활인들이 再活을 통하여 産業戰線의 役軍으로서 消費의 生活에서 生産의인 生活로 전환될 때 人的 資源이라는 면에서도 그 意義가 있는 것이다.”

現代의 自由民主主義國家는 大産業 自由資本主義을 그 기반으로 하면서 그가 내포하는 偽善 를 제거하기 위해 長生 修正하는, 즉 修正資本主義의 與和 경제 체제를 指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修正의 정도를 남아 全面 計劃化의 共產化는 自由を 抵制하면서도 非能率을 초래하는 실증을 우리는 지금의 無産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自由資本主義가 그 自由競争性 때문에 상당수에 담하는 사람은 그 能力에서 다소 一般人에 미달하기 때문에 完全非自發의 失業에 있게 하여 무위도식하게 하겠다 아니면 더 심하 게 一般勞動者인 家族 中 한 사람의 勞動을 自己를 倒立 수 밖에 없게 하는 등으로 오히려 社會의 무담으로 있게 한다면 그 問題을 방치하는 것이 社會 全體의으로 바치도 어렵지 못한 것 은 明著観火하다.

上記와 같이 社會福祉 學者 또는 保社部 等 社會福祉分野에서 이러한 側面의 主張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經濟學者 또는 經濟企劃院 等 經濟分野에서는 大産業로 이론 偉業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政策을 分配의 政策으로 본다든가 더 나이가 適應의 조차로만 간주하는 정향이 있어 뒤로 미루는, 즉 先成熟 後福祉(또는 後分配)의 분위기에 있었지 않아 여겨진다. 물론 大産業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研究員.
분의 부족 경제적 측면에 이르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자 등 사회적
부족에 의한 보통 사람보다는 다소 모자라기는 하지만 80 내지 90퍼센트 또는 그 이상의
労動力を 소유하고 있는데 그들 단지 저출출과 결과적으로 그들이 생산한 것을 소비자들이 넘치는
부담으로 인해하는 욕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의는 이러한 문제를 탐구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부족에 의한 労動力政策의 經濟학의 不定의
가 아니라 生産 또는 成長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즉 經濟學의으로
経済性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一般 失業對策에 그 결과가 더 큰 것을 바탕한 優先의 實施의 必
要를 論하고 政策方向을 提示하고자 하는데 目의이 있다.

其實 經濟學界에서는 失業問題를 다룬다 하더라도 一般實業者 問題만 해도 매우 큰 問題로
접지하려고 있었기 때문에 社會福祉對象者를 별도로 다룰 것이 없었던 것에서 忽視된 理由를
 찾아 볼 수는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社會福祉對象者를 일반 보통 労動者의 労動力에 다소 미
달하는 障礙者, 노인, 주부, 学生, 病약者, 無職가정 실업자, 異性, 報発금식자들을 모두
일컫는다면 相當한 比重을 차지한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게다가 一般失業者는 대체로 비록 非自發의 失業이라 하더라도 多数의 自發性이 있음을
否認할 수 없는 것이라면 政策이 必要하고 그 效果가 큰 곳은 오히려 社會福祉對象者를對象
으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本論의 主目的은 自由競争의 社會에서 競争力이 모자라서 労動力所有자에 完全非自發의 失
業 또는 絕對失業狀態로 전락하여 오히려 社會의 부담으로 존재하는 것을 労動力화하는데 있
어서, 모델(Model)을 準定하고 經濟理論화하며 그 實際 対策을 提示하는데 있다.

그리고 本論의 問題은 自由競争下에서 競争力 劣者로 간주되는 労動力を 소지하
여 絕對失業으로 전락하는 사람들등의 生産力화한다는 議에서 經濟的 論文에서도의 性格을 취
한다. 公企業擴張, 규모를 기업주가 지나치게 부담하지 않게하는 형태의 社會교육, 시간제
労働 및 現代社會의 고향력화와 더불어 낭비적인 시간을 줄이는, 즉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
는 夜間学校를 보편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政策등을 主張하는 데에도 본론의 目의이 두고
있다.

公企業擴張, 終身雇傭制, 夜間學校지원 등은 障礙者, 老人, 主婦, 学生 등 社會福祉對象
者의 労動力화에 큰 效果가 있는 것이 아니고 一般失業問題의 解決에도 重要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 정책의 경제적 유통 및 선진국의 체제적 실용적 현황

1. 정책의 경제적 유통

1) 정책의 경제적 유통 분석

아무리 고안된 자본주의 즉 혼합경제체제라 하더라도 자유의 측면을 강조하는 현대의 대부분의 자유주의의 체제에서 정책의 측면에서 자유를 누리는 만큼 경제의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측면에서도 평생생존의 과제가 강조되어, 경쟁력이 모자라는 노동력은 마치 경쟁력이 모자라는 공업이 도태되는 것과 같이 도태되는, 즉 자연적 해체로 변질 수 없게 않게 하는 것이 있다. 아는 이 경우는 자연적 해체 해체에서 전환의 객관성이 없으므로 자연적 해체의 해체 즉 추적해체이라고 불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자유의 둔함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증할 수 없는 것과 구별되는 점이다. 암묵적으로 말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아주 좋은 것은 조건으로도 일하고자 하는 이상의 일부가 일부가 될 가능성이 적을 것이 다. 또한 이는 노동자도 없게 되더라도 인식의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해체는 중심으로 한 사회실체로서는 피고용의 측면에서도 옥외경제의 노동자로서의 해체를 쉽게 할 수 있으며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로서의 경우도 일반인에 비해 경쟁력이 도저히 존재하기 어려운 것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 것이며 비교적 일반인에 비해 사회의 해체의 대상자는 그런 것이 더 있다는 것이나, 절대적으로는 이상이 냉장한 만큼 임하기는 않는다. 즉 사회의 해체의 대상자인 노동력이 일반인에 비해 도사 일반인의 노동자들이 도사 일반인에 비해 자연적 해체와 이에 따른 해체, 또는 자연적 해체와 이에 따른 해체가 높이 가능성이 더 많은 예기가 있는 노동자들이 적절해 소비자로서의 일반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논의를 간추려 보면 노동력이 일반인에게는 일반적인 해체일 수록 정책이 지원하여 해체가 가능성이 많은 것을 생산인 노동력으로 하게 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경제적)이라는 것이다.

정책에 소요되는 자원은 일정하다고 볼 때 더 해체가 높이 강화된 노동력을 초래,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사회 전체의로부터 보아서 이론으로는 자명한 것이다.

가령 일반적으로 해체가 있을 때, 정책의 도움이 없어도 노동시장의 수요공급불균형에 의하여 이기적 해체의 빈곤에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해체의 모자라든지 어려움의 보존, 즉 일반인들이 빈곤 또는 시각적으로 해체하는 감정 등
으로 인하여 失業狀態에 있는 경우는 그 失業狀態가 계속될 가능성이 더 많아 이들을 지원하는 데 政策費用(cost)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後者쪽의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모델(Model)을 設定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 論説해 보자. 시각 또는 청각등 障碍이 있어 一般的인 직업敎育를 받지 못하고 無能力者로서, 失業狀態에 있다고 하자. 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費用(cost)이고 이 費用에 의해 평생 生産의 인 일을 하는 것이 效果(benefit)가 되는 것이다.

만약 費用 10을 들였을 때 효과가 비용 10을 들여지 않았을 때 사장되는 90까지 살아 난다면 投資效果는 지대한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非自發의으로 死蔵되는 勞動力이라고는 볼 수 없는 一般失業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다른 條件이 同一하다면 社會福祉對象者인 失業者들에게 一般人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政策가 実施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2) 一般福祉経済学의 立場

本稿 主張하고 그 밖은 달리 하더라도, 같은 結果를 目的으로 하여 主張해 온 기존의 經済學中 특히 福祉経済學(Welfare Economics; 후생경제학으로 불리어 오기도 했음)의 側面을 中心으로한 見解들을 소개함으로써 本稿의 主張을 證明시키고자 한다.

 먼저 한 經済學辭典2)이 설명하고 있는 福祉経済學 설명中 그 一部를 보자.

"厚生経済學(英)Welfare Economics;經濟學과 倫理學의 連繋 또는 經済理論中에서 政策的 方法의 基礎을 發見하려는 構想은 特히 新古典學派의 經済學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피구」(Pigou, A. C.)는 英國功利主義哲學의 傳統에 限界效用分析의 發展을 附加시켜 이것을 集 大成하였다." 「피구의 厚生經濟學은 經済學의 目的을 社會全体로서의 經済的 厚生의 增進에서 求하고 個人을 中心으로 功利主義의으로 求약하였다. 그는 為什로 測定할 수 있는 厚生(國民分配分)을 經済的 厚生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經済的 厚生(物質的 幸福)과 厚生一般(精神的 幸福)은 紙Susanで 一致되는 平行関係에 있고 經済的 厚生은 國民分配分(國民所得)으로 表現된 다는 二者的 對應關係を 假定한 후 一國의 經済的 厚生的 增進을 左右하는 條件과 같은 基本條件を 提示한다. 「한 社會의 經済的 厚生은 1) 國民分配分의 平均量이 크면 줄수록 2) 貧者에歸屬되는 國民所得이 크면 줄 수록 3) 國民分配分의 年年의 增 및 貧者에歸屬되는 年年에 取得分 變動이 적으면 적을수록 아마 더욱 더 컷질 것이다.'

이것을 간략하게 國民所得의 增大 均等 安定의 條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피구」厚

생경제학의 3가지 목제가 있다.

3) 기타 관련 자료

다음에는 위에서와 같은 목적을 둔 화합 경제체계와 불완전 경제학의 관점과 관련된 간
해들을 좀 더 살펴보자.

김정현 교수는 "경제학: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의 경제체계와 불완전 경제학의 관점과 관련
해들을 논한 있다. 3)

福祉國家의 理念과 思想은 資本主義經濟의 모순에서 그를 시정하려는 여러 가지 道적
입이 죽고 키가는 가운데 漸進의 것으로 형성되었다. 福祉國家實現을 희망시키는 客觀의 인
동기는 資本主義經濟體制의 반역이고, 구체적인 동기는 험난, 貧困, 無知, 喧譁을 救濟 하
려는 희망이며, 농촌의 집단에서의 労動力保護와 革命運動의 緩和 및 有效需要의
喚起, 新政, 勞動運動과 民主主義의 성장 등이다.

福祉國家의 思想의 基礎는 社會改良主義系統에 속하는 "카인즈"의 修正資本主義, 美國制
度學派에서 비롯하여 新資本主義, 그리고 民主社會主義 등으로써 國民福祉向上을 위한 資
本主義制度의 人為的 修正이란 聚集된 問題意識에서 있다. 工業化的 路徑으로써의 資本
主義制度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오늘날의 經濟政策思想은 몇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資
本主義經濟의 原理, 즉 競爭의 原理가 人間의 自由를 가장 잘 보장하고 經濟合理性を 가지
온다고 보는 것이 自由主義의 立場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個人本位의 競爭原理가 弱肉強食
을 초래하여 사회의 繁榮을 해치기 때문에 自由放任보다 公正한 競爭을 할 수 있는 방향으
로써 市場機構, 社會制度, 法律面 등 여러 각도에서 희망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新自
由主義이다.

新自由主義는 福祉國家 실현을 주장하는 修正資本主義思想이 국가간섭에 의한 資本主義
修正이란 美名下에 人間의 自由를 침해한다고 하여 반대한다. 舊自由主義에 입각한 經濟學
이 古典學派經濟學이고, 新自由主義에 입각한 經濟學이 新古典學派經濟學이다. 美國의 "시카
고"學派, 獨逸의 프라이버크 學派에 속하는 "오이겐", "회프케"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自由主義의 立場이 理想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희망을 제시할 것이다.

2. 先進國의 장애자 정책 現況

先進國에 있어서는 균형한 經濟成長에 비례하여 保護자의 福祉를 위한 教育과 再就職의 法
3) 金潤煥, 經濟學(理論과 實際), 서울, 裕豐出版社, 1975, pp. 774~790.
制度의 조치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보육과 재활과가 수집한 障碍者福祉 關聯資料 中 歐美와 日本을 중심으로 그 動向를 살펴보고자 한다. 4)


美은 障碍者의 教育과 再活은 人間의 平等과 尊嚴性을 배양으로 하여 行政機構로서 保健・教育・福祉 (HEW)省 관할하에 教育厅 (USOE)과 再活庁을 두고 있다. 關係法으로는 再活對策를 위한 再活法 (Rehabilitation Act; 1973)과 모든 障碍者를 위한 教育 對策으로 障碍児 教育法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1975)에 이어 障碍者差別禁止令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Handicap in Program and Activities Receiving on Benefiting from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1977)에 의한 补完措置가 이루여져 联邦政府의 財政 支援을 받는 機關이 障碍を 理由로 하여 活動에의 参与나 또는 給付를 拒否하는 등의 差別을 禁止하고 있다. 이러한 法令들의 重要なる 의의로서는 첫째, 法的 權利와 責任을 行使하는데 最大限의 自由를 保障했고, 끝으로 自由롭고 開放된 地域社會의 資源을 最大限으로 利用할 수 있는 可能性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日は 障碍者を 위한 法制度로서 身體障礙者福祉法 (1949), 精神薄弱者의 綜合的인 福祉를 도모하기 위하여 心身障礙者對策 基本法을 制定하여 이들에 대한 綜合的인 施策을 推進하고 있 다. 特히 이 法들은障礙者の 更生을 援助하고 必要한 保護과 福祉를 도모함을 目的으로 하 여 醫療, 教育, 職業, 所得保障 等을 規定하고 있다. 또한 心身障礙者對策 基本法은 障碍者를 위한 國家 및 地方公共團體의 責務を 明確히 하고 障碍의 發生預防에 대한 措置, 醫療, 訓練, 教育, 雇傭의 促進, 年金 등 綜合的인 對策를 推進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이 외 에도 身體障礙者雇傭促進法 (1960), 職業訓練法 (1969), 職業安定法 (1969), 雇傭對策法 (1966) 등 을 制定하여 障碍者의 雇傭促進과 保障에 注力하고 있다. 이러한 法制度에 의한 障碍者의 職業 再活은 職場生活에 要求되는 모든 意에는 適應訓練 (work adjustment training)을 위한 象

4) 保社部 再活課, 障碍者福祉 關聯資料, 1984, pp. 17～22.
備職業訓練(prevocational training)를 통하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직업을 구하고, 전문 인력의 고용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고용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를 높임으로써 사회적 복지의 한가지로 인식되고 있다.

日本의 경우,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은 3년 이상의 고용기간을 갖춘 기업이어야 한다. 고용기간이 3년 미만인 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3년 이상의 고용기간을 갖춘 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의 고용은 고용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고용은 고용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에 한정되어 있다.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울, 사회보장부에서는 활동을 전담하고 있으며,视觉障碍者 再活장애는 27개 주에서
視覚障者者 再活局을 두고 있다.

미국의 職業再活에 있어서는 再活의 可能한 人口を 約 400만으로 추산하고 있고, 그 밖에
도 중도の 再活이 不可能한 障碍者에게는 社會障保部에서 社會障保금으로 生計補助金(SSD)
을 支給하고 있다. 그리고 能力이나 資質이 不足하여 一般社会에서 競争할 수 없는 障碍者를
위해서는 授産場 sheltered workshop을 設置하여 政府가 必要한 物件을 生産토록 하며, 障
碍者의 能力を 評価하고 障碍者의 不足한 生活費를 社會福祉基金에서 援助해 주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1,200만의 人口中 約 3만名 以上の 障碍者가 200개의 障碍者工場에
서 일하고 있으며, 障碍者 雇佣センタ는 政府産業體, 労組 및 民間機関과 緊密한 關係로 일하
며 障碍者에 의해 生産된 物件이 一般商品과 같이 販賣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障碍者의 雇佣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稅法와 勞動法 等에서는 障碍者에게 支給
되는 債給額만큼 雇佣主의 稅金을 公私해 주도록 하고 特例한 勞動條件を 推進하의 要求하지
않게 하였다. 빈민나라 주 또는 市単位로 새로운 特殊教育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聯邦
政府가 3年間 全體財政를 責任하고 있으며 職業再活을 위한 障碍者의 評價, 訓練, 教育, 就
業 等에 必要한 財政은 再活庁에서 州再活局を通じ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専門家를
양성하는 大學에 대해서는 直接的인 財政支援은 学生들에게도 奨學金과 生活費を 必要
して 再活庁과 障碍児教育局에서 援助하고 있다.

또 聯邦政府의 援助에 의해서 建立되는 建物에는 빈寡不自由者가 활체어를 타고 다
닐 수 있도록 하는 建物構造의 設計を 義務化하고 視覚障者者가 안내자와 함께 기차나 버스
로 장거리 旅行을 할 때 안내자의 運賃을 免除해 주는 市範圍한 福祉對策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歐美 先進 제국은 이미 18세기로 부터 障碍者의 保護, 治療, 教育 및 社會의 再活保
護對策을 마련하여 國家次元에서 多元 性은 홀로 順序히 填補하여 왔고 日本은 1940年
代에 障碍者福祉對策가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先進 諸國의 障碍者福祉의 動向을 통하여 알 수 있는 障碍者福祉의 多様한 方が
지 경향은 非中央集権化(decentralization)과 非機関 또는 非施設화(deinstitutionalization)이
다.

特殊教育을 歷史의 側面에서 볼 때, 첫 段階로 障障者들에게 生存에 必要한 資源을 制限하
고 그들을 격리수용하여 治療하였고, 두번째 段階로는 그들의 身體의 生存에 必要한 資源을
提供해 줄으므로써 이질적인 人間即 障障者을 扶養한다는 극히 慈善의 息은 父権의(Pater
nalistic) 태도였고, 세번째 段階로는 障障者를 社會의 일원으로 非障障者와 同等한 位置의
在로 생각하여 그들에 대한 책임과 요구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게 되었다. 장애자의 경우 그들을 격려수용하여 보호함으로써 그들의 물질적 요구를 만족할 수는 없으나, 사회의 지지와 보호가 요구된다. 그들의 특성에 따라, 그들의 생활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그들의 사회적 참여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적으로 볼 때 장애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사회에서 극소수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으며 그들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가 포용할 수 있는 환경의 구현이 큰課題로 부각되고 있다.

다음의 장에서는 한국의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간단하게 논의로 자 한다.

### 3. 労動力化 方向

1. 社會福祉對象者 勞動力化的 特性

障害자, 노인, 천재 등 사회福祉對象이 일반労働者들과 다른 점이 있다. 그들은 労動力化하는 데 있어서도當然히 일반労働者에게는 다른 고리를 하여야 한다.

認識制度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가려내어 그들에게 우선적으로認識해 주는 것 등이 필요함을 말한다.

그리고 사회福祉對象者 労動力化 정책의 형태는 각對象者別 및 労動機関別으로 적절히 이루어야 하는 바 애를들면 송발이 노동하는 경제가 경제로 그들을 고용함으로써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이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유인책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유동을 운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경우도 그가 自由競爭下에서도 그 사업을 발전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세제나 보조금 등 그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의 목적에 따른 형태는 一定하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労動력이 일반労働者와 競爭上の 열외인 것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一部는 労動能力에에는 문제가 안되고 오히려 기능상의 특화 등으로 인하여 一般労働者보다 우위인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권한에 의한 경우가 있어 이 경우는 이런 권한해소 목적의 형태로 그 지원형태 마저도 각각에 맞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정책의 필요성이 비해 그냥한 社會의 認識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문제를 느끼고 본고를 쓸 의의가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의 특성등에 의하여 전에 우선 본고의 주장에 대한 認識에 입각해서 정책을 실시해 나가고자 하는 자세를 갖는 것만도 그 의의가 큰 것이라 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즉 지금 단계에서 이 점
이 더욱 重要한 것으로 보이는 단계가이 때문에 본고의 重點이 앞의 章 福祉對象者 労動力
化 政策의 經済性(生産性) 分析에 二어 졌고 以下의 本章 労動力化 方向에는 重力 重要性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労動力化 方向에 대한 評論은 하지 않고 중요하게 검토해 보
아야 할 몇가지 點들을 論議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2. 障碍者 労動力化 方向

1) 직업훈련과 教育의 增大

障害者가 自営業을 하는 後고용자로서의 一歩 하는 직업훈련과 教育을 增大함이 必要함은 二 말
할 나위가 없다. 特히 進學에 있어서도 교육받은 後 그 일로 進行하기 어려운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門
이 열려 있는 것이 이들을 實業 狀態에서 労動力化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오히려 일정한 財源으로
써 一般實業者에 우선하여 이들에게 배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장애자들은 완全非自発의 實業 또는
絶對実業으로 있으면서 오히려 주위 사람의 부담 또는 社會의 부담으로 있을 가능성이 一般實業者에
비해 많기 때문에는 論議는 本稿의 취지이자 意義로써 이미 論議하였으므로 여기서는 再
論議치 않는다. 같은 條件이면 障碍者에게 政策을 呼喚하는 것이 더 生產的이라는 議論을 하
도록 하는 것이 本稿의 주제라면 本節 以下의 論議는 그에 따르는 異常적인 論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로 前者들에 현제 保社當局의 主張을 經済企劃院이 얼마나 自己의 民政으로
서 認定하고 政策化하는 자세를 갖느냐가 問題이지 保社當局의 政策의 타당성 그 자세를 問
題삼는 입장이 본고의 重要이 아냐라는 것이다. 그린 맥락에서 이하의 항목도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 自営業 支援： 우선적 認・許可制度，세제・보조금

資本主義社會에서 労動力化의 形態는 自営業 아니면 後高용이다. 그 중에서 自営業을 支
援하는 方法으로서 우선적 認・許可制度を 障碍者들에게 實施하는 것이겠으나 이것은 一般
노동자들의 自由에 제한을 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最소한에 그치고 反面에 異常
나 보조금 形態로 支援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면 前者에 따르는 무작용을 极端화하면서도 前
적을 달성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보조금 支援大上是 근로유인책의 一環으로써의 성적을 살
려 가급적이면 高用者 狀態로 하는 것이 낡다. 前者에 정책용을 부담하게 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다. 어디까지나 비용은 正當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支援이나 자발적인 前者의 이
에 대한 異常적 자세나 努力 등은 별개의 問題이다. 勿論 此에 대한 것도 당연히 政策課題

143
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3) 諸 고용증대책

(1) 취업알선활동 증대

취업알선 활동의 중요성은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가급적 무료인 것이 좋겠으나 재
원의 괴변가 문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하더라도 이에의 費用(cost)에 비해서
효과(benefit)는 一般失業者가 아닌 障碍者인 경우가 더 큰 것은 논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
제자 대비적 계산을 해 본 필요는 없다.

(2) 공企業擴張에 의한 고용증대

이는 Keynes 理論을 확대하는 건해라고 볼 수 있으며 일반 실業者對策으로는 重要하게 고려
해 볼 수 있었으나 障碍者를 위해서는 더욱意義가 클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도를 넘어서서
自由經濟의 이점을 잃게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한계성과 더불어 주의를 요한다.

(3) 終身고용制 확립

일의 종류에 따라 労動能力의 연령과 관련하여 다른 경우 각각 그 労動能力의 절정기(p-eak time) 以後에는 급여를 下向 시킴으로써 企業主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이 종신고용
제도 실현이 가능하다. 이것이 자연 상대에선 不可한 部分을 정부가 費用(cost)으로 支出
하는 政策를 實施하면 실현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도 물론 一般失業者에게도 적용되나 費
用(cost)財源은 그 限界性 때문에 障碍者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4) 시간제 고용증대

편모를 포함한 주부 등에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써 관련은 非高適으로 企業主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政策費用(cost)으로써 지원금을 지원하되 企業주로 지원
하는 등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이다.

(5) 고용인원 일정퍼센트 의무화

經濟企劃 関系자들이 이를 위한 예산편성이 一般勞動者에의 預算편성이 보다 生産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여기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지 이것도 자유적 관점에서 제한
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의 시도는 박차가 가해져야 한다.

(6) 집단작업장(춘) 확대

작업장(춘)내에 기주를 하는 非公私营 労動을 하던 형태는 어떤 것이라 하
더라도 맡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타 사회福祉대상 유형별 노동력화 방향

1) 노인, 중신고용체(非高貸)

노인을 위한 기본적 대책은 노인 본인이 중신고용 상태로 있기 때문에 중신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업주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업종 또는 노동 종류별로 한정일할 수 있는 연령을 파악하고 그 이후에는 인건비를 하향하여 업주측에서 볼 때 고용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나 보조금 형식의 지원이 동원되기도 하여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밖에, 안전한 장애인, 연령, 근로수단 및 건강상의 이유 등에 따른 특례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편모, 시간제노동(非高貸) 증가

편모를 포함한 주부들도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는 것이 사회 전체 생산力를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것에 더해, 기업주가 부담을 느끼게 하기 위해 고용을 요구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로서, 필요하다면 정부정책비용(cost)이 쓰여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그 형태는 보조금이나 지급등이 있을 수 있었다.

3) 기타 대상자, 노동력화 대책

위에서 논한 사회복지대상자로는 근로학생, 고아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한 주부, 병약자, 민간가정실업자, 전문가, 무급자 등에 대해서는 그 각각에 맞는 특별한 노동력화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근로학생들 위해서는 야간학교 교육받는 것을 지원하여 근로자로서 무리하지 않게 노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 이것은 평생 necessary로.
육을 받아 가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정책과 더불어서, 무조건의 것으로 점은 시점 부적절한 교육에 남비적으로 인생을 소모시키는 것을 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사회의 육지의 효과를 얻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문현, 《경제학(理論과 實際).》서울: 裕誠出版社, 1975, 8.

金尙培, 《勞動法.》서울, 博英社, 1976, 2.

朴炳鎬, 《國際經濟概論.》서울, 經文社, 1983, 2.

保健社會部, 《各國障礙者雇傭關聯法.》

保社部, 《再活課.》障礙者福祉 關聯資料, 1984.

保健社會部, 《保健社會白書.》1985.

서울장애인자립생활협회, 《身心障礙者之社會統合 및 職業再活에 관한 세미나.》1983, 11.

再活, 《再活.》서울, 1985, 9.

서울장애인자립생활방문전, 《再活 프로그램의 方向과 福祉館의 役割.》1983, 12.

沈泰植, 《勞動法概論.》서울, 法文社, 1976, 1.

李根植, 鄭一溶, 尹辰浩共譯, 《第三世界的經濟發展論.》서울, 比峰出版社, 1985, 3.

李滿基, 《經濟政策論.》서울, 日新社, 1968, 4.


李明雨, 《厚生經濟學.》서울, 法文社, 1985, 3.

張仁協, 《社會福祉概論.》韓國社會開發研究院, 1881, 4.

鄭雲聲, 《巨視經濟論.》서울, 茶山出版社, 1984, 9.

趙淳, 《經濟學原論.》서울, 法文社, 1975, 10.

車權, 《財政學概論.》서울, 博英社, 1973, 3.

體系經濟學批判, 責任編輯委員 崔客佑, 李承潤, 丁炳旭, 外 十一人教授, 文明社(서울), 1970, 3.


Abstract

Superiorities of the Benefits of Social Welfare Clients Laborization Policies

Hak-Suk Jun*

Until today, the economic planners are supposed to be thought the budgets of welfare parts are anti-growth ones in economy. Those are, they say, only distributional ones and they also want such policies but only after sufficient growths those ones must exist. However, this thesis insists that the social welfare clients have less abilities in labor powers and are difficult or could not compete with general labors and therefore ultimately could be easily unemployed or couldn’t have any jobs at all for themselves with any spontaneities of themselves.

Generally unemployed or jobless persons are supposed to have a little but a spontaneities at all for those result situations of joblessness.

In relation with this kind of fact, this writer persisted the fact that if the government pay some costs for the welfare clients to laborizations, the society will be benefited more with economic growths comparing with the benefits of policies for the general unemployed or jobless persons.

In this thesis the handicapped laborers are handled mainly but the aged persons, the widowed mothers or such kind of less-ability persons are handled a little at the same time all in the relation with the above aspect.

The writer strongly wishes the properous and welfare society or world could be made and the handicapped or less-ability persons could also be happy through these kinds of policies. For this kind of eager desire’s realizations, in a word, this thesis might have been written certainly this writer ascertains finally.

*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